



일본의 경제종합대책 주요내용 및 향후 정책과제

지난 8월 29일 일본 정부는 생활자 불안해소,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변혁가속, 성장력 강화라는 3가지 목표 구현을 위한 종합경제대책을 발표함. 향후 재정규율 유지로 기초수지 흑자 전환을 지향하면서도 감세혜택의 공정성 보장과 더불어 유효한 경기대책을 어떻게 수립·집행할지가 최대 정책과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 지난 8월 29일 일본 정부는 고유가 등에 따른 구매력 저하 및 중소기업의 생산원가 부담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종합경제대책을 발표함.
 - 이번 대책의 총 사업규모는 11조 7,000억 엔이나 중장기적 목표인 재정건전화를 위해 실질적인 재정지출은 2조 엔으로 한정하고 이 중 1조 8,000억 엔은 올해 보정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함.
 - 적자국채는 발행하지 않을 방침이나 추후 논의 예정인 소득세 및 주민세의 정액감세가 연내 실시될 경우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 이번 종합경제대책은 종래 공공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재원을 긴급현안에 집중한다는 원칙 아래 생활자 불안해소,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변혁가속, 성장력 강화라는 3가지를 표방하고 있음.

〈표 1〉 일본 종합경제대책의 주요내용

(단위 : 조엔)

항목	주요내용	국비	사업규모
생활자 불안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소매가격 인상 억제 •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 후기고령자의료제도 저소득층 보험료 경감 	0.4	0.4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변혁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광발전설비 도입 주택 보조금 지급 • 공립대학교 약 1만동 내진시설 • 에너지효율 투자 촉진을 위한 세금 경감 	0.9	1.9
성장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재료 급등에 대응한 중소기업 대상 보증제도 창설 • 운송업의 할증료 도입 지원 • 에너지효율 선박 및 차량 도입 촉진 	0.4	9.1
합계(지방 0.1조 엔분 포함)		1.8	11.5
총계(재정투융자추가분 포함)		2.0	11.7
※ 정액감세	2008년도 내에 소득세 및 주민세의 정액감세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함. 또한 노령복지연금 수급자에 대한 급부금 지급을 함께 검토함.		



- 생활자 불안해소 대책은 고물가로 인한 가계 및 기업의 애로를 일시적으로 완화시켜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변혁가속 대책은 에너지 효율화 제고 및 신에너지 개발 촉진 등을 겨냥하고 있으며, 특히 향후 3~5년 이내 태양광발전의 보급 확대를 통해 동 설비가격의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임.
- 성장력 강화 대책은 중소기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총 11조 7,000억 엔의 사업규모 중 9조 1,000억 엔을 중소기업금융공고의 신용보증제도 확충을 통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및 운송업 유료할증료 지원 등에 할당함.

〈표 2〉 종합경제대책 국비 1.8조엔의 재원조달 방안

합계 1.8조엔	재원 확보 방안 및 과제
약 1조 엔 (재원 확보 방안이 초점임.)	① 건설국채 (기초재정수지 흑자 전환이 요원해짐.)
	② 세출삭감 (얼마만큼 삭감이 가능한지 명확하지 않음.)
	③ 특별회계 잉여금 등 매장금(埋藏金) (잉여금 활용에는 법 개정이 필요함.)
약 3,000억 엔	2007년도 결산잉여금 처분
약 3,000억 엔	금리하락에 따른 국채경비 절감분
약 1,500억 엔	2008년 예산의 예비비 처분

- 이 외에 올해 말로 기한이 완료되는 주택대출 감세 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 내년까지 감세대상 차입액 상한을 현행 2,000만 엔에서 3,000만 엔으로 인상하며, 세액공제 한도액도 162만 엔에서 300만 엔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함.
- 또한 장기거주주택과 에너지효율주택의 세제혜택 차별화를 통해 우량주택의 보급을 촉진함.

〈표 3〉 주택대출 감세확충 방안

	현행제도	일반주택	장기거주주택	에너지효율주택
차입액 상한	2,000만 엔	3,000만 엔	3,600만 엔	3,300만 엔
공제기간	10년과 15년 택일	10년과 15년 택일	15년	10년
공제율	공제기간 10년의 경우 1~6년은 1%, 7~10년은 0.5%	공제기간 10년의 경우 1%	1.2%	1.2%
최대 공제액	160만 엔	300만 엔	650만 엔	400만 엔

- 향후 재정규율 유지를 통해 기초수지를 흑자로 전환하고 국내총생산 대비 채무규모를 안정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감세혜택의 공정성 보장과 더불어 유효한 경기대책을 어떻게 수립·집행할지가 최대 정책과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 이번 대책은 중의원 선거를 염두에 둔 임시방편적인 색채가 짙어 일본경제의 구조개혁을 통해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들이 요구된다는 지적임. **KIF**